

기초생활체육 지원사업 ‘광주 0원’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신청 기피 지역 격차 심화 최경환 의원 “국비지원 상향조정 등 방식 개선해야”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없을 경우 지역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사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4천84억원을 지원했지만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61억원(13%), 서울 407억원(10%) 순으로 많았다. 대전은 47억원(1.2%), 인천은 70억원(1.7%)을 지원받는데 그쳐 지원비율이 고작 1%대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 강원 등 6개 시·도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사업과는 별도로 인구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유소년축구장·다목적체



육관 등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81.6%가 ‘재정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니 이와 관련된 개선안은 전혀 없다.

최경환 의원이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

들이 적정 부지 확보,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등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이밖에 운영비 부담, 일정하지 않은 공모 시기와 지원 방식, 당해 연도 예산 확정으로 지자체 추정 편성 시까지 사업 추진 지연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최대 30억원인 정액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의 공모 방식이 아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신청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5151khj@haramail.net

지방 정가

“스마트시티 조성해 미래먹거리 확보”

임미란 광주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주장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남구3·사진) 의원이 23일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광주시 차원의 투자와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도시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 중앙 정부와 도시들이 앞다투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시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부산, 대구, 인천, 시흥, 세종 등에서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광주시도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에서 미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 스마트 시티는 도시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업무 담당조직의 전문 분야별 세분화와 통합관리 수행 체계 구축,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및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때”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율형차 개발을 게을리할 수 없고, 첨단 에너지산업 구축을 위해서라도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ramail.net



여성일자리 박람회 찾은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를 찾아 박람회장을 돌아보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기업체 관계자 등 1천700여명이 참여해 440여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전남도, 환경미화요원 58명 정규직 된다

이보라미 도의원 질의에 “내년 7월까지 전환”

전남도는 운영직인 청사 환경미화요원을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정의당·영암2·사진) 의원은 23일 도정질문에서 “도청내 환경미화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최중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말까지도, 근로자 대표단, 외부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대상과 방식 및 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합의 점도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7월까지의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청 시설관리 운영직은 환경 31명을 포함해 시설 17명 조정 4명 안내 4명 관리 2명으로 모두 58명이다.

운영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말까지로 운영비는 82억6천만원이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전남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고작 1곳

정부 국정과제 핵심 공약 불구 지지부진 센터 부지변경 지연 등 사전 준비 부족 탓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인 전남지역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가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핵심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의 임시 개소에 이어, 정식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 1곳만 정식 개소를 했다.

상당수 시군이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관하지 못한 것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시군은 센터가 부지 변경으로 지연되거나 발주가 늦어 지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정식개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정월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정월 497명 가운데 확보 인원은 247명(49.7%)에 불과했다.

일부 시군은 올해 센터 개소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15곳을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면서 “계획보다 늦어진 6곳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력충원 역시 정식개소에 맞춰 시군에서 채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별로 1개소씩(전국 252개 시·군·구)을 설치해 2018년부터 시군 보건소 직영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광주 ‘펼쳐’

송갑석 의원,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2.9%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기술기반의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의 광주 지원율이 펼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사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 받은 ‘각 시도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10년간

총 878억을 지원받아 강원,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지원 금액 3조 원 중 2.9%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6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광주는 총 지원금의 2.7%인 163억 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연도별 광주의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3.8%였지만,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2.7%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송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막혀있다”며 “정부 지원금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ramail.net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광주시, 포상금 지급한도 2억원으로 높여

광주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고 2억원으로 상향되고 신고 기한이 3-5년으로 확대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1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부조리’

명칭을 ‘부패행위’로 정정하고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에 맞게 부패행위 가 있던 날부터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금전이나 물품, 향음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넓혀 적용한다.

또 포상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최고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대상은 광주시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출연기관 임직원이다. 주요 부패행위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와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내용과 증거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21세기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의 통합의료
장흥에서 시작합니다!

난치질환

- ✓ 뇌질환(뇌졸중, 파킨슨병, 우울증, 스트레스 등)
- ✓ 만성염증성질환(자기면역질환)
- ✓ 통증질환(척추, 관절통증질환)
- ✓ 암(암수술 및 항암 치료후 면역력 증강치료)

통합의료

- ✓ 보건복지부 지정 ‘통합의료’ 시범기관
- ✓ 양·한방 협진 2단계 시범 사업 기관

힐링치유

- ✓ 편백숲우드랜드, 천관산, 수인산성 등
- ✓ 전라남도립승마장
- ✓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